

■ 2010년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급여

구분	총인원	1인당 평균급여	전년대비 증감률	전국 평균과의 차이
합계	15,171	2,611	3.0%	
서울청	5,118	2,826	3.0%	215
중부청	4,138	2,544	5.0%	-67
대전청	1,384	2,470	3.3%	-141
광주청	1,095	2,362	0.6%	-249
대구청	1,211	2,359	0.9%	-252
부산청	2,225	2,590	2.8%	-21

■ 지방국세청별 개인사업자 현황

구분	2010년			
	총계	일반	간이	면세
본청	5,109,881	54.8	34.3	10.9
서울청	1,188,128	723.403	341.143	123.582
중부청	1,628,295	949.924	519.800	158.571
대전청	498,922	239.644	201.182	58.096
광주청	471,789	216.756	190.099	64.934
대구청	495,568	246.893	192.446	56.229
부산청	827,179	423.680	305.682	97.817

■ 2010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구분	계	단위: 천(만)원, %	
		인원	금액
서울청	3,577	76	2.1
중부청	5,398	176	3.3
대전청	929	32	3.4
광주청	3,908	122	3.1
대구청	561	22	3.9
부산청	1,860	65	3.5
합계	5,398	176	3.3

■ 한숨만 나오는 호남경제 현주소

지난해 개인사업자 평균 소득 광주 2000만원·전남 17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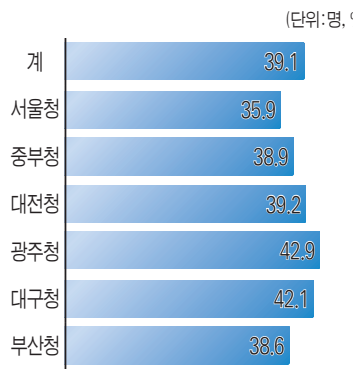
서울의 절반 수준... 전남은 2연속 전국 꼴찌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2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는 '취약과 소외'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호남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근로자의 소득이 모두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생산규모, 기업규모, 부도율 등 다른 경제지표와 더불어 호남경제의 부실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법인 소득 전국 최하위 = 지난해 광주지역 법인의 평균 소득은 전년도에 비해 5.9% 하락한 1억6000만원, 전남은 전년도 2억2000만원에서 31.8% 하락한 1억5000만원이었다. 전국 평균은 전년에 비해 4.2% 떨어진 4억6000만원이었다. 하락률은 전남이 경북(-32.9%)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컸으나 경북지역 소득 금액은 5억30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전남의 하락률이 큰 것은 2009년 1만5341개에서 지난해 1만7139개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11%)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사업자 소득은 서울의 절반 수준 = 지난해 광주지역은 개인사업자의 평균 소득은 2000만원, 전남은 1700만원, 전북은 1900만원이었다. 이같이 개인사업자 평균 소득이 낮은 것은 영세사업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호남지역의 소규모 개인사업자간 간이사업자 비율은 지

■ 2010년 지역별 과세미달비율 현황



※2010년도 근로소득세 면세점은 근로소득공제, 본인공제, 자녀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표준공제 등을 반영하여 4인 가족 기준으로 1,770만원임 (자료:국세청)

역전체 사업자 대비 4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인 34.3%보다 6%P, 서울 28.7%보다 11.6%P 높은 수치다.

◇저소득 근로자는 많고 고소득 근로자는 드물어 = 지난해 호남지역 근로자 평균급여는 2362만원으로 전년 대비 0.6%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전국 평균 급여는 2611만원, 서울은 2826만원이었다. 광주와 서울 근로자 급여 차이는 지난 2008년 372만원→2009년 395만원→지난해 464만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평균임금이 낮은 것은 저임금 근로자가 많다는 것. 지난해 호남지역 근로소득자의 42.9%(47만명)는 각종 공제 후 연간 소득이 1770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세 면제자였다. 이같은 과세미달 비율은 전국 최고치다. 또 과표구간이 가장 낮은 단계인 1200

만원 이하 구간의 구성비도 전국 평균 60.6%보다 5.3%P 높은 65.9%였다.

반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3000명(전체의 2.6%)이었다.

또 지난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률은 4.2%로 제주를 제외하곤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 EITC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700만원이 안 돼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주는 일종의 근로장려금이다.

◇대책 = 호남의 인구는 지난해 기준 전국 10.4%이고 면적은 전국도의 20.8%인 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광주 43.2%, 전남 11.5%, 전북 17.3%로 전국 평균 52.2%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 실물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역내총생산도 2009년 기준 104조원으로서 전국(1066조)의 9.8%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호남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영여기업·생산적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세부행정면에서 납기 및 징수 유예 등 통합적인 세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계 유기농대회 참가한 전남농산물

28일 경기도 남양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7차 세계 유기농대회'에 참석한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전남유기농 제품관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캐서린 디마테오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RM) 회장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56만개 만든다

예산 10조 편성... 청년·여성·장애인 등 우선 지원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10조 1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56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체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 집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정부 총지출(326조1천억원)의 3.1%에 해당된다. 올해와 비교해 일자리 예산 증가율(6.3%)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5%)보다 0.8%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5천억원 늘린 9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자활사업 3969억원(6만6000명), 노인 일자리 1666억원(22만명), 여성인턴 101억원(4000명) 등 총 2조 5000억원을 편성해 56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일자리 예산을 짰다.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전용창업자금 2000억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539억원을 투입한다.

여성 분야는 중소기업 공동보육시설 설치 지원 등 458억원, 모성보호

육아지원 6122억원,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84억원을 반영했다. 고령자 분야는 노인 일자리 1666억원, 베이비부머 희망찾기 31억원을 집행한다.

장애인 분야에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 300억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1322억원으로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취약성공패키지 사업 802억원, 직업능력 개발 지원 36억원, 자영업자 전직 지원 3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또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기간·전략 직종 훈련에 895억원(9만2000명), 신성장동력 분야 부처통합사업 154억원(4만5000명), 국가인적자원개발혁신사업 신성장동력분야 신규 운영기관 지정 등 1398억원을 투입한다. <연희뉴스>



“현 경제 위기 국면”... 정부 비상체제 가동

정부가 현 경제상황을 '위기' 국면으로 보고 비상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주재로 월 2회 열리는 국민경제대책회의가 다음 주부터 비상경제대책회의로 전환되고, 기획재정부 장관

이 경제부처 장관들을 모아 중장기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도 위기관리대책회의로 바뀐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경제부처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열 달 만으로, 현 경제상황이 '위기' 국면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경제대책회의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정부는 기존에 중장기 정책과제 외에 단기적인 시장 불안에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28일 "유럽 재정 위기가 2008년 리먼 사태처럼 일시적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사안은 아니지만 꾸준히 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존의 중장기 현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단계적으로 주간·월별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살피고 부처 간 대응책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희뉴스>

☎ 문화바우처 고객센터 02-760-4673~4 www.voucher.kr

혜은이의 꿈이 영글어갑니다 - 문화바우처

13살 혜은이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것과 뮤지컬을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것.
집안 형편 때문에 뮤지컬 극장을 찾을 엄두도 못 내던 혜은이는 이번 주말 드디어 소원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혜택이 늘어난 문화바우처 사업 덕분에 뮤지컬을 직접 보러 가게 된 것이죠.
혜은이의 꿈을 따뜻하게 보듬는 문화바우처를 통해 오늘도 희망은 커져갑니다.

“문화바우처는 따뜻하게 누리는 당신의 권리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관람과 도서관입 등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환경,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외국인,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등록)

지원범위 지원대상 가구당 5만원권 문화카드 1매 발급
※ 2011년 9월 26일 이후 추가발급 대상
① 만 10세~19세(1992년 1월 1일~2001년 12월 31일 출생자 지원대상 청소년별 개인카드 발급
② 사회복지시설거주자 중 지원대상자 개인카드 발급

신청방법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voucher.kr)를 통한 본인신청 또는 주민센터,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voucher.kr)를 통한 본인신청 또는 대리신청
※ 단, 청소년 추가 발급 및 시설거주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이용하여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문화나눔캠페인 | 문화바우처 편